



한덕수 총리,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

-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대피와 통제를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
- 산사태, 도로사면·급경사지 붕괴 위험시 신속한 사전대피 명령 발동
- 농작물, 농경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·복구에 힘쓸 것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(수) 오후 4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*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.

* 행안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, 경찰청, 소방청, 산림청, 기상청, 17개 시·도

□ 한 총리는 “항상 정부와 지자체가 염두에 둘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”이라고 말하고, “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”을 지시했다.

- 특히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, 하천변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.
- 또한 지속된 강수로 산사태, 도로사면·급경사지 등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·국토부·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한 사전대피 명령을 발동할 것을 주문했다.
- 아울러 한 총리는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, “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지원과 복구에 힘써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이 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7월 13일(목) 14시 현재 도로 25개소, 하천변 178개소, 둔치주차장 130개소를 사전 통제하고 있으며, 일시대피자 17세대 31명이 미귀가 중이라고 보고했다.

- 특히, 7월 12일(수)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총리가 지시한 바와 같이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통해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, 교통관리, 예방순찰 등이 적극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.

- 농식품부는 그간 저수지 붕괴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장소 5,004개소를 지정하여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, 저수율 80% 이상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.
 - 또한, 7월 13일(목) 14시 기준 134.6ha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며 관계 기관이 공조하여 침수지역 농작물 조기배수, 병해충 긴급방제 등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,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·평가하여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이와 함께 주요작물에 대한 주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.
- 국토부는 호우에 대비하여 수해 취약 비탈면 등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, 토사 유출이 발견된 20개 구간에는 방수포·방호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,
 - 수해에 취약한 비탈면 등을 1일 1회 이상 순찰하며 집중 점검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.
-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산불피해지,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우려지역 약 33,00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,
 - 산사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산사태정보 시스템(PC), 스마트산림재해앱(모바일)을 통해 대피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.
 -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(제주 제외)에 3단계인 ‘경계’가 발령되어 있다.
-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는 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 소임”이라며 재난에 더 선제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 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